

한국의 ‘사회적 합의’에 관한 경기변동론적 고찰*

이 덕 재**

논문초록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형성된 이른바 ‘1987년 노동정치 체제’라는 특수한 과도기 중 도입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는 새로운 노사관계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논의는 과도하게 노사관계 혹은 노동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논의의 확장이 제약되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논의가 축적론적 설명과 함께 논의될 때 좀 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경기변동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합의가 등장하는 시기가 경제위기국면과, 또한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불안정성이 노동배제적 의사(擬似)합의적 구조와 각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 주제어: 사회적 합의, 경기변동, 경제위기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3, J5

접수 일자: 2008. 8. 13. 심사 및 수정 일자: 2008. 11. 14. 게재 확정 일자: 2008. 12. 4.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03301). 이 논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하면서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e-mail: econjlee@korea.ac.kr

I. 머리말

1987년 6월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허문 사회전체의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행사되었던 노동부문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가와 자본의 노동배제전략과 전투적 노동운동의 저항 및 연대투쟁이 상호 모순적으로 충돌 결합한 이른바 ‘1987년 노동정치 체제’라는 특수한 과도기가 형성되었다(장흥근, 1999; 임영일, 1998; 노중기, 1997). 과도기 중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는 새로운 노사관계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적 제약의 힘은 강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크기와 무관하게 과대성장했던 강한 국가, 국가-자본연합의 개발연대시기의 종식과 함께 국가가 후퇴한 자리를 대체하며 시민사회를 압도한 거대자본, 양적으로 표현되는 낮은 노조조직률과 시민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노동조직의 허약성 등은 적지 않은 구조적 제약요인이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중기는 실질적 사회적 합의가 실험되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라 부름)와 노사정위원회를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이유로 “무엇보다 국가의 대노동배제전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노중기, 2003, p. 7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전략적 선택론’의 입장에서 구조결정론의 경직성 및 한계를 비판하고 역으로 이러한 강한 구조적 제약 때문에 오히려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의 성과에 적극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유범상 2003; 임상훈 2003; 최영기·김준·노중기·유범상, 1999(이하 최영기 외, 1999)). 전략적 선택론은 ‘이해대변구조’와 ‘정책결정과정’을 동일시하거나 후자를 전자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구조결정론은 오류이며 양자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여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는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은수미, 2006).

이처럼 그간 한국의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논의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만큼 상호 화해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논의가 과도하게 노사관계 혹은 노동정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논의의 확장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논의들이 구조와 전략 간의 동학을 염두에 둘 경우에도 논의의 틀은 주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지형에 집중된다. 우리는 여기에 축적론적 설명이 함께 논의될 때 그간의 논의가 좀 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축적 체제와 노동체제변동의 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인데(노중기, 2008, p. 106), 왜냐하면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변화는 ... 축적체제라는 구조가 노사관계 집합행위자들의 행위환경을 규정하는 경향성이 강하”(이종래, 2006, p. 481)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와 자본의 장기적 노동배제적 전략이 지속되더라도 주기적 경기변동은 노사관계지형에 복잡한 동학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회적 합의의 역동적 측면을 과도하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의 심층을 지배하는 축적조건의 보편적 측면을 소홀히 하면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의 ‘상대적’ 자율성을 과장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기변동론적 분석은 여기에 일정한 균형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축적구조, 특히 경제적 위기의 구체적 조건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나아가 특히 왜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불안정한지 그 물적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형태가 등장한 시기를 경기변동의 순환주기 속에서 역사적으로 개관한다. 3절에서는 Weisskopf의 접근방법을 따라 자본축적과정 속에서 노동의 힘과 이윤율 등 주요변수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4절에서는 3절의 방식을 따라 순환주기별로 자본축적과정의 주요변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사회적 합의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논의한다. 끝으로 5절에서는 이러한 경기변동론적 관점에서 그간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불안정성을 띠게 되는 이유를 사회적 합의의 기본조건인 ‘비배제성’과 ‘평등성’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한국의 주요 사회적 합의의 역사

1. 한국의 주요 사회적 합의

전후 서유럽에서 발전한 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는 크게 필립 슈미터

(Schmitter, 1974) 류의 ‘이익대표의 조직화(혹은 중재) 체계’와 램브루크(Lehmbruch, 1979) 류의 ‘정책형성의 제도화된 체계’로 정의 되어 왔다. 전자가 특히 이해집단의 “중앙조직의 발전과 독점적 대표체계”(강명세, 2000, p. 81)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가치의 권위적 분배’ 그리고 그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공적 권위와 서로 협력하는 정책형성의 제도화에 주목한다. 따라서 전자가 ‘구조결정론’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전략적 선택론’을 지지한다.¹⁾

이러한 두 유형은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평가에도 중요한 준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평가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실험의 기원이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데는 명확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적 박정희 및 전두환 정권 하의 강도 높은 노동통제와 노동배제적 기조 하에서 사회적 합의의 기본전제인 자발성 및 민주성원리는 원천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1987년 민주화 이후 몇 가지 사회적 합의의 실험들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크게 보면 민주화 이후 실질적 사회적 합의의 실험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개위’와 1기 ‘노사정위원회’²⁾부터 시도된 것으로 보는 평가(최장집, 1997; 임상훈, 2003; 은수미, 2006)³⁾와 한국의 구조적 한계상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시도된 적이 없다는 견해(임영일, 1998; 노중기, 2008)가 맞서는 형상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1987년 이전의 사회적 합의의 ‘형식’은 말그대로 ‘형식’에 불과한 ‘유사합의주의’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부분인데, 이 논문은 사회적 합의의 ‘형태’의 출현을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 사회적 합의 여부에 관한 평가는 가능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총체적 노사관계론적 구조와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1) 물론 사회합의주의에 대한 유형화 혹은 분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소개는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강명세(2000)를 참조하라.

2) 노사정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법개정을 통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명칭변경 및 공익위원수 축소 등을 제외하면 기존의 법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다루는 시기가 대체로 1기 노사정위원회에 집중되므로 노사정위원회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3)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정치의 방식과 내용의 전환을 의미하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즉 노·사·정이라는 노동정치 주체들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노동정치였다”(최영기 외, 1999, p. 3: 강조는 원문).

수밖에 없는 별도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변동과 관련한 이 글의 분석도 향후 이러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기초적 작업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의 실험들을 간략히 살펴본다.⁴⁾

1987년 6월 항쟁에 뒤이어 발생한 1987년 7~9월의 노동자대투쟁은 그동안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하의 강고한 억압과 탄압을 물리치고 노동운동을 고도로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이른바 '1987년 노동정치 체제'라는 특수한 과도기가 형성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국가의 노동배제전략과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간의 충돌이 빚어낸 불안정한 이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는 새로운 노사관계형성의 가능성과 함께 적지 않은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1989년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서 기원을 잡고 이후 "중앙노사협의회 경사협(국민경제사회협의회-인용자) 노태우 대통령주재 노사정대토론회 노·경총임금합의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이 흐름 속에 위치"짓는다(최영기 외, 1999, pp. 3-4).⁵⁾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경제사회협의회(이하 '경사협'이라 부름), 노·경총중앙임금합의, 노개위, 노사정위원회를 주요 사회적 합의형태로 채택하고자 한다.⁶⁾

한편 경사협의 모델이 된 것은 1980년 중앙노사협의회였다. 중앙노사협의회는 1980년 노동법 개정과 함께 새로 제정된 노사협의회법 제28조("노동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⁷⁾ 소속하에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중앙노사협의회

4) 물론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의 실험으로 볼 것이냐라는 근본적 물음은 해소되지 않지만 슈미터류의 이해대표체제나 램브루크류의 정책형성체제의 '유사'형식의 출현을 포함하고자 한다.

5) 이후 이러한 흐름은 사회적 합의가 본격화되는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이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2006),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네덜란드 노동재단을 모델로 삼은 노사발전재단 설립(2007)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도입되었다.

6) "1987년부터 구성되어 활동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중앙노사협의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3자구성적(tripartite) 기구"이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과정을 살펴볼 때, 정책입안자들이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3자구성적 심의위원회 방식으로 한 것이 '사회적 합의 체제'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최영기 외, 1999, p. 29: 강조는 원문)기 때문에 논의의 성격상 여기서는 제외한다.

7) 이후 노동청의 노동부로의 승격에 따라 1981년 4월 개정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됨.

는 정부주도의 관변적 성격때문에 노·사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996년 노개위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형태상의 측면에서 중앙노사협의회의 도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⁸⁾

그런데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도입된 중앙노사협의회의 기원은 사실상 1975년 10월의 ‘중앙노사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사간담회는 박정희 정권의 비상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추진과 맞물려 체계적 노동력 관리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사간담회는 사실 박정희 정권시기 과대성장한 강한 국가의 능력 속에 국가의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노동이 사회적 발언권을 제도화해낼 수 없었던 1960년대와 대비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⁹⁾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의 경제위기와 그동안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 노동은 국가정책의 사실상 하위기관으로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하는 본래적 의미에서 노동조합 역할간의 갈등을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심각한 경제위기, 그리고 1971년 대통령선거의 고조된 위기감에서 비롯한 1971년 12월 27일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보위법’)의 공포, 뒤이은 1972년 10월 유신체제는 국가의 강력한 노동력관리가 시작될 것을 알렸다.¹⁰⁾ 이는 한 측면에서는 어용노조로 하여금 준국가기구로서의 역

8) 하지만 그동안 중앙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이후에 전개되는 사회적 합의체제의 형성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최영기 외, 1999, p. 38)라는 적극적 평가도 있다.

9) “1960년대 동안 노총의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주요 전술과 수단은 항의와 탄원이었다 … 그러나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대표들과 국가당국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접촉은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고 있었”는데 1969년 11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960년대의 상황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최장집, 1997, p. 265).

10) “그것(국가보위법에 의한 비상대권-인용자)은 또한 국가경제를 통제해야 할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되었고,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노동자계급이었다”(최장집, 1997, p. 107). 또한 다음을 보라: “...1960년대의 노동정책은 본질적으로 1953년 노동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 결정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70년대 단결정책의 체계상의 특징은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관계 제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결권(파업권 포함)이나 단체교섭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기축적인 노동정책으로 기능했다는 데 있다 … 따라서 1970년대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보위법이 헌법을 대신하고, 또 특별법이 노동관계 제법을 대신하는 주객전도의 입법체계의 시대였다. 핵심적인 노동입법은 ‘국가보위법’(제9조)이었다”(김삼수, 2002, pp. 261-263; 강조는 원문).

할을 분명하게 갖게 한¹¹⁾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주로 교회세력이 지원한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어용노조와 권위주의 정권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각종 정부협의기구 즉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1975년에 정부, 고용주,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는 3자 기구가 바로 '노사간담회'였던 것이다. 노사간담회는 공식적으로 노동이 이익대표체계로서 국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채널에 최초로 제도적으로 참가한 기구로 볼 수 있다. 물론 노사간담회는 노사정간의 의사소통 통로구실을 하며 노사관계 문제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또한 국가의 강력한 노동억압과 노동통제가 전개되었던 유신정국 하에서 도입되었다는 면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노사간담회는 이후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형태의 원형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사회적 합의의 형태에 관한 분석대상은 1975년 노사간담회, 1980년 중앙노사협의회, 1990년 경사협, 1993-94년 노·경총 중앙임금협의, 1996년 노개위, 1998년 노사정위원회로 한정한다.

2. 사회적 합의와 경제위기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는 경제위기 등 외부적 압력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다.¹²⁾ 특히 한국처럼 사회적 합의의 제도적 조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의 등장은 경제위기 등 외적 충격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¹³⁾ 그러나 경기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의 등장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비록 경제적 영역과 주요한 연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경제적인 '사회적' 영역, 즉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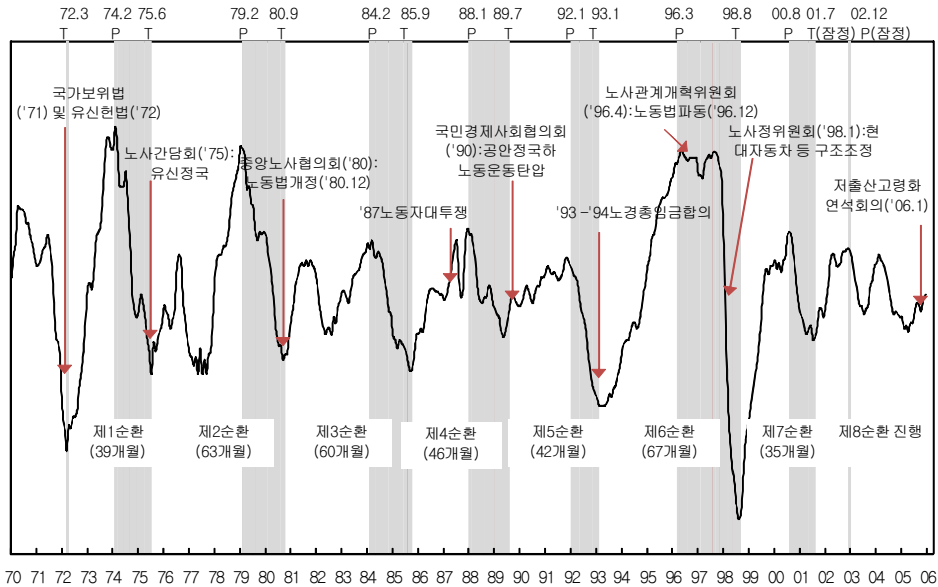
11) "1971년의 국가보위법 선포 직후에 한국노총은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최초의 집단들 중의 하나였다"(최장집, 1997, p. 187).

12) "최근의 사회적 합의 및 사회협약의 실현 배경으로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혹은 경제위기, 경제통합 등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 등 '외부적 요인'의 압력이다"(은수미, 2006, p. 27; 강조는 원문).

13) Baccaro and Lim은 최근 주목할만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세 나라, 즉 이탈리아, 아일랜드, 한국 등 이들 세 나라의 사회협약의 근저에 경제적 위기가 공통적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한다: "이들 세 나라에서 사회적 협약 형성으로 이끈 과정은 외적 충격(경제위기-인용자)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작하였다"(Baccaro and Lim, 2007, p. 28).

정치가 갖는 고유성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¹⁴⁾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주요 사회적 합의형태들이 경제위기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즉, 경기변동의 규칙성이 확인되는지 살펴본다.

〈그림 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사회적 합의



P: 정점(Peak), T: 저점(Trough).

출처: 통계청.

위의 〈그림 1〉은 통계청에서 1970년에서 2001년 기간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기준순환일을 기준으로 주요 사회적 합의의 등장시점을 포착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외견상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의 주요형태들은 대체로 경기 하강국면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975년 노사간담회(1975년 6월), 1980년 중앙노사협의회(1980년 9월), 1990년 경사협(1989년 7월), 1993-94년 노·경총 임금합의(1993년 1월), 1996년 4월의 노개위와 1998년 1월의 노사정위원회의 등장

14) 물론 경제위기가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 단기적인 주기적 경기변동 내에서의 위기인지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런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1998년 8월)은 정확하게 정점에서 저점으로 후퇴하는 경기불황기(괄호안의 경기변동상 저점)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험에서 서구에서와 같이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합의가 발생하는 일반적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한다. 노동의 힘이 강한 유럽적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허약한 노동과 강력한 노동통제적 권위주의적 국가 하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합의형태는 외형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큰 질적 차이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서구와 달리 압도적인 국가와 자본의 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약한 노동하에 등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의 형태들이 제안되는 경기변동국면들, 특히 경기수축국면의 물적 조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라는 고도의 노동정치를 경제환원론으로 물고가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과도하게 소홀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은 향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좀더 풍부하고 균형잡힌 해석을 위한 보완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자본주의적 경기변동과 노동의 힘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서 노동은 자본운동의 경제적 논리에 구속된다. 자본운동은 경기변동(business cycles)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노동이 자본운동의 경제적 논리에 구속된다는 것은 경기변동의 주기 속에서 노동부문이 일정한 규칙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 혹은 노동정치지형은 특정한 구조적 주형 내에서 일정한 동학을 드러낸다. 사회적 합의 역시 이러한 동학에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특정한 성격을 자본운동의 내적 논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등장과 소멸의 내적 계기를 이해

15) 따라서 1980년 5월 신군부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산하에 네덜란드의 경제사회협회의를 모델로 삼은 '사회경제협의회'의 도입에 대해 결국 국가엘리트들이 "합의를 형성하는 데 전적으로 억압적인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최장집, 1997, p. 276)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생산과 투자는 이윤 획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윤율은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윤율이 하락(상승)할 경우 기업들은 낮은(높은) 예상이윤율에 근거하여 투자를 축소(확대)한다. 총산출과 고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자축소(확대)는 따라서 경기수축(확장) 및 경제위기(호황)로 이어진다.

이윤율은 일반적으로 자본스톡에 대한 이윤의 크기로 표현된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주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이윤율결정의 주요 요소에 대한 강조는 달라진다. 이 글에서 우리는 Weisskopf(1979)의 방식을 따르는데 그는 자본주의적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갈등과 소득분배, ②생산된 상품 전체가치의 ‘실현’문제, ③기술변화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행태. 사실, 이러한 구분은 기술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이윤율 구성요소에 ②의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이윤율 ρ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ho = \frac{\Pi}{K} = \frac{\Pi}{Y} \cdot \frac{Y}{Z} \cdot \frac{Z}{K} = \sigma_{\pi} \phi \zeta \quad (1)$$

여기서 Π 는 이윤량, K 는 자본량, Y 는 부가가치(혹은 소득), Z 는 잠재적 산출물(혹은 능력)을 각각 나타내며 또한 σ_{π} 는 이윤분배율, ϕ 는 가동률(capacity utilisation), 그리고 ζ 는 산출/자본비율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들 비율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σ_{π} 는 주로 ①의 ‘이윤압박설’, ϕ 는 ②의 ‘실현위기설’, 그리고 ζ 는 ③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설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Weisskopf의 실증분석은 노동운동과 축적과정의 동학적 연관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¹⁶⁾ 이 논문이 Weisskopf의 접근방

16) “맑스주의적 공황이론에 대한 검증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으로 Weisskopf의 좀더 중요한 기여는 이윤율의 변화에 대한 그의 경험적 분석과 이러한 분석이 B국면에서 이윤분배율의 행태를 밝혀주는 점”이며 그의 분석의 주요 결론은 “RSL(노동의 힘의 증대)가 B국면에서 이윤율 하락에 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Munley, 1981, p. 160).

식을 따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Weisskopf는 이윤율과 실질 성장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순환주기를 세 국면으로 나눈다. A국면은 이윤율과 실질성장이 모두 증가하는 시기로서 불황국면으로부터 회복 및 확장기를 표현한다. B국면은 이윤율이 정점을 지나 하강기에 접어드는 반면 실질성장은 정점에 이르는 호황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다.¹⁷⁾ 끝으로, C국면은 이윤율과 실질성장이 모두 저점을 향하는 수축기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분석 하에 Weisskopf는 전후 미국의 이윤율 변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순환주기의 세 국면별 주요변수

(단위: 연평균 %성장률)

구 분	단계		
	A	B	C
이윤율(ρ)	+26.8	-10.1	-25.3
이윤분배률(σ_π)	+17.0	-8.8	-15.6
가동률(ϕ)	+10.8	+0.5	-11.9
산출/자본 비율(ζ)	-1.1	-1.8	+2.1

출처: Weisskopf(1979).

위의 〈표 1〉을 보면 불황국면으로 볼 수 있는 C국면에서 이윤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확장단계로 진입하는 A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윤율이 가파르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과정 모두에서 이윤분배률의 비중은 각각 61.6% 및 63.4%로 이윤율변동의 약 2/3를 차지하면서 매우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사실상 호황국면인 B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무려 87%에 이르고 있다. 전형적인 이윤압박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Weisskopf, 1979; Boddy and Crotty, 1975; Glyn and Sutcliffe, 1972).

17)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확장국면기의 실업 감소에 따른 노동자들의 교섭력 강화로 이윤분배률을 대가로 더 큰 임금률을 가능케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Boddy and Crotty, 1975). 또 하나의 흐름은 확장기의 부적합한 소비자 수요에 따라 이윤율 감소를 억제하는 생산물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한다(Sherman, 1976). 또한 경기확장기의 후반부에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산출단위당 간접노동비용의 증가와 함께 이것이 이윤의 하방압력을 낳는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Shultze, 1964).

〈표 2〉 순환주기별 B국면의 주요변수

(단위: 연평균 %성장률)

구 분	순환주기				
	I	II	III	IV	V
이윤율(ρ)	-10.8	-10.5	-9.7	-8.2	-11.5
이윤분배률(σ_{π})	-9.6	-7.9	-10.1	-6.1	-10.3
가동률(ϕ)	+1.5	-1.1	-1.0	-1.6	+4.5
산출/자본 비율(ζ)	-2.7	-1.6	+1.3	-0.4	-5.6

출처: Weisskopf (1979).

한편, 위의 〈표 2〉를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B국면의 특징들이 전체 시기에 균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주기의 B국면에서 이윤율이 10%안팎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 하락의 평균 80~90%가 이윤분배률의 하락에서 비롯하고 있다. 호황국면에서 노동시장의 팽박에 따른 노동의 힘의 강화를 뚜렷하게 엿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경기변동으로 표출되는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의 모순적 전개과정과 사회적 합의형태의 등장간의 연관성에 대해 장기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들 비율들에 대한 상세한 의미분석은 여기서는 제외한다. 다만, 이들 비율들이 경기변동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 지표를 활용한다.

IV. 한국의 경기변동(business cycles)과 사회적 합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윤율변동을 중심으로 경기변동의 흐름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 3〉은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전체기간 및 순환주기별 주요변수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활성화 되었던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 1기가 걸쳐 있는 6순환주기의 경우 전기간 중 이윤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전기간 평균은 10.6%이며 지속적으로 이윤율은 장기 하강하고 있다. 특히 이윤분배률의 하락수준 역시 전기간 평균 26.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22.4%로 잉여가치 분배를 둘러싼 자본의 위기와 그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다. 실제 뒤이은 이윤분배률은 29.9%로 상승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오던 임금분배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따라서 장기구조적으로 이 시기의 축적위기는 사회적 합의가 등장하기 좋은 물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의 값(전기간 및 주기평균)

(단위: %)

구 분	전기간	순환주기							
		I (72:1-75:2)	II (-80:3)	III (-85:3)	IV (-89:3)	V (-93:1)	VI (-98:3)	VII (-01:3)	VIII (-지속중)
이윤율(ρ)	10.6	17.2	14.4	10.0	12.9	9.1	7.4	8.7	8.25
이윤분배률(σ_π)	26.5	30.9	29.1	25.0	28.0	23.6	22.4	29.9	27.7
가동률(ϕ)	94.4	80.1	89.3	91.2	100.1	100.3	98.7	98.6	100.9
산출/자본 비율(ζ)	42.3	69.5	55.5	44.0	46.0	38.7	33.5	29.5	29.3

자료: 〈부표 1〉 참조.

물론 여기에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변화된 노사관계지형이 개입되어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성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은 1990년대 초반 국가의 노동배제적 전략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동원형태의 합의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에 범외단체였던 민주노총의 참여는 이 시기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이 실질화되도록 한 전제조건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의 조건이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경제위기국면은 성장하는 노동의 주체적 역량과 결합하면서 실질적 사회적 합의형태의 등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사회적 합의를 Weisskopf의 접근방식을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순환주기를 세 국면별로 나누어 주요변수의 변동률을 살펴보자. 우리의 분석은 목적상 각 변수의 수준값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더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변동률분해는 기본방정식 (1)의 이윤율 $\rho = \frac{\Pi}{K} =$

$\frac{\Pi}{Y} \cdot \frac{Y}{Z} \cdot \frac{Z}{K} = \sigma_\pi \phi \zeta$ 을 시간에 관한 변화율 형태 즉, 다음과 같은 ‘성장회계방정식’(growth accounting equation)

$$\dot{\rho} = \dot{\sigma}_x + \dot{\phi} + \dot{\zeta} \quad (\text{단, 여기서 각 변수 } x(t) = \frac{(dx/dt)}{x(t)} \text{를 나타낸다}) \tag{2}$$

으로 변경하여 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순환주기의 세 국면별 주요변수의 변동률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 4>와 <표 5>는 이윤율과 이윤율의 주요구성요소의 경기변동양상을 보여준다. 각각 이를 살펴보자.

<표 4> 순환주기의 세국면별 주요변수(한국)

(단위: 연평균 %성장률)

구 분	단 계		
	A	B	C
이윤율(ρ)	-1.20	-2.26	-2.05
이윤분배률(σ_{π})	-0.05	-0.60	-0.70
가동률(ϕ)	0.46	0.44	0.43
산출/자본 비율(ζ)	-1.61	-2.10	-1.78

자료: <부표 1>참조.

우선 위의 <표 4>의 A국면에서 급격하게 회복되는 이윤분배률과 이윤율 하락에 대한 산출/자본비율의 높은 기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A국면에서는 축적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순환의 출발점을 이루면서 왕성한 투자가 형성되는 초기로서 이 국면에서 사회적 합의의 유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Weisskopf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A국면에서는 이윤율이 양(+)의 값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경우 A, B, C 국면 모두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마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된 고도성장에서 확인되듯이 왕성한 자본축적에 의한 추세적 이윤율 저하경향의 힘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강하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한 경기변동은 관측된다.¹⁸⁾ Weisskopf의 분석과 달리 한국의 경우 C국면보다 B국면에서 이윤율하락이 더 크지만 A국면보다는 모두 더

18) Foley & Michl은 미국, 영국, 일본의 이윤분배률에 관한 지난 20세기 동안 장기 역사적 추이가 대단히 안정적이었지만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윤분배률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관측결과를 내놓는다. “불안정성은 경기변동의 주기별 혹은 5년 정도마다 발생한다. 불황기 동안, 이윤분배률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번영으로 회귀할 때에만 다시 회복한다”(Foley & Michl, 1999, p. 27).

크게 나타난다. 또한 B와 C국면에서 이윤율 하락에 대한 이윤분배몫의 비중이 호황국면인 A국면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확인된다. 즉 A국면에서 이윤분배몫의 하락이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데 약 4% 정도의 기여를 하는 반면, B국면에서는 약 27%, C국면에서는 약 34%를 차지함으로써 불황이 깊어질수록 이윤분배몫 하락을 둘러싸고 자본의 위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노동과 자본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B국면을 각 순환주기 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아래의 <표 5>는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는 1996년 4월과 1998년 1월에 해당하는 VI순환주기의 B국면에서 주요변수의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순환주기별 B국면의 주요변수(한국)

(단위: 연평균 %성장률)

구 분	순환주기							
	I (72:1-75:2)	II (-80:3)	III (-85:3)	IV (-89:3)	V (-93:1)	VI (-98:3)	VII ¹⁾ (-01:3)	VIII (-지속중)
이윤율(ρ)	-2.05	-3.85	5.30	-1.10	-2.00	-6.93	NA	-0.04
이윤분배몫(σ_π)	-0.70	-2.54	2.40	-1.77	-0.48	-5.93	NA	-0.17
가동률(ϕ)	0.43	-0.97	-8.60	-2.22	-0.48	-0.83	NA	0.56
산출/자본 비율(ζ)	-1.78	-0.34	11.4	2.95	-1.09	-0.15	NA	-0.44

자료: <부표 1> 참조.

주: 1) 7순환주기 B국면의 값은 1개여서 변동률값을 추정할 수 없음.

이윤율의 하락폭은 -6.93%로 나머지 시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자본 위기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윤율 하락에 대한 이윤분배몫 하락의 비중은 무려 86%에 이른다. 1996년 12월 날치기 노동법 통과에 의한 1997년 1월의 노동법 파동과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노사정간 갈등, 특히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한 핵심요소가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였다는 점은 이러한 자본의 위기적 상황과 적지 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이윤분배몫의 회복에 의해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적 입장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왕성한 자본축적의 힘, 그리고 그에 따른 추세적 이윤율 저하경향 때문에 Weisskopf가 대상으로 삼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경기변동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추세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경기변동의 패턴이 관측된다. 호황의 정점에 이른 B국면에서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C국면에서 본격적인 경제위기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국가와 자본의 비상한 대응이 나타난다. 대응의 목표는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이윤분배 몫의 회복을 통해 이윤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등장한다면 우리의 분석에 따를 때 구체적으로 C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안한다.

아래의 <표 6>은 각 순환주기를 A, B, C 세 국면으로 나누어 사회적 합의형태가 등장하는 구체적 시점을 추적한 것이다. 예상한대로 한국에서 주요한 사회적 합의의 형태가 등장하는 시기는 대부분 이윤율과 실질성장이 모두 하강하는 경기후퇴기에 집중되어 있다. 즉 사회적 합의는 실질산출이 저점에 이른 C국면에 집중해있는데(음영부분) 1975년 노사간담회, 1980년 중앙노사협의회, 1990년 경사협¹⁹⁾, 1993-94년 노·경총 임금합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이다.²⁰⁾

예외적으로 노개위가 경기변동의 정점에서 등장했다는 점은 별도의 해석이 요구된다. 여타의 사회적 합의가 경제위기국면에서 국가와 자본의 노동계에 대한 경제위기극복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지만 노개위는 이런 면에서는 다소

19) 경사협의 공식 창립일은 1990년 4월 10일이다. 따라서 경사협은 5순환주기의 A국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사협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급격한 임금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1989년 3월부터 일종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부활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임금조정위원회」설치 등을 구상한 데 대한 노동계의 반발 등 일련의 과정의 산물로 보고 따라서 경사협을 4순환주기의 C국면에 배치한다. C국면에 해당하는 “1989년 하반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하던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한 폭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최영기 외, 1999, p. 53)었는데 실제 노동계(한국노총)가 경사협의 초안으로 볼 수 있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시점도 1989년 11월 5일이었다.

20) 물론 이러한 추이를 가지고 경기변동론상 경기하강국면이 사회적 합의형태를 가져온다는 필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듯이 오랫동안 지속된 왕성한 자본축적 및 고도성장으로 이윤율과 실질생산증가의 추세적 힘이 대단히 강해 웨이스크opf가 분석한 미국의 경우와 같은 뚜렷한 국면구분이 쉽지 않다. 또한 서구의 사회적 합의가 주로 임금 및 고용안정과 생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적 측면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제도가 매우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순수경제적 영향만을 추출하기 쉽지 않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에 관한 논의는 경기지표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적 구조적 제도변수들이 포괄되는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전체적 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개위는 불법단체로 간주해온 민주노총이 지속적인 조직화에 성공함에 따라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문제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사정, 특히 노사관계를 둘러싼 오랜 과제였던 법제도 정비가 핵심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¹⁾ 실제 노개위의 최초 모델은 1992년 '노동법개정연구위원회'의 안이었다는 점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표 6〉 이윤율과 실질산출의 장기역사적 순환과 사회적 합의

(단위: 10억원, %)

주기	국면	주요상황	분 기	실질산출 ¹⁾	이윤율	주요 사건
I	A	Y-저점	1972:1	4,797	13.9	
	B	이윤율정점	1973:1	6,300	20.3	
	C	Y-정점	1974:1	7,498	18.5	
	A	Y-저점	1975:2	8,589	15.7	노사간담회/유신헌국
II	A	이윤율정점	1976:3	11,292	17.7	
	B	Y-정점	1979.2	16,801	11.6	
	C	Y-저점	1980:3	17,492	8.2	중앙노사협의회/노동법개정(1980)
	A	이윤율정점	1983:4	26,782	10.7	
III	B	Y-정점	1984:1	26,455	11.3	
	C	Y-저점	1985:3	30,947	13.1	
IV	A	이윤율정점	1987:2	40,484	13.9	
	B	Y-정점	1988:1	46,036	13.4	
	C	Y-저점	1989:3	50,617	11.0	경사협(1990)/공안정국
	A	이윤율정점	1989:4	53,612	10.7	
V	B	Y-정점	1992:1	62,356	8.7	
	C	Y-저점	1993:1	63,753	8.0	노·경총 임금합의(1993~94)
VI	A	이윤율정점	1994:4	79,578	9.5	
	B	Y-정점	1996:1	84,146	6.7	노개위/노동법과동(1996)
	C	Y-저점	1998:3	83,772	7.5	노사정위/구조조정(1998)
	A	이윤율정점	2000:3	106,023	9.7	
VII	B	Y-정점	2000:3	106,023	9.7	
	C	Y-저점	2001:3	121,942	8.4	
VIII	A	이윤율정점	2001:3	121,942	8.4	
	B	Y-정점	2002:4	134,795	8.2	

자료: 〈부표 1〉 참조.

주 : 1) 제조업 실질산출은 1995년 가격기준임.

21) “정부는 노개위를 전반적인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기구로 구상했지만 실제 노개위는 노동법 개정안 작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다”(최영기 외, 1999, p. 114).

물론 그렇다 해도 노개위 역시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1996년 노동법 개정은 ‘국제경쟁의 격화와 생산패러다임의 변화’(조호래, 1997, p. 63) 라는 경제적 이유”(최영기 외, 1999, p. 116) 라는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 특히 1996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반기의 경상수지 적자심화와 물가상승 등 경기가 빠르게 하강국면으로 진입하자 재계의 경제위기설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어 갔다. 이른바 ‘고비용-저효율론’이 확산되었고 정부와 재계는 고비용의 핵심주범을 ‘고임금’으로 지목했다(최영기 외, 1999, pp. 138-139). 이에 따라 노개위 의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파견제 및 정리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노개위 탈퇴와 결국 노동법 파동까지 이어진 점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조건간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불안정성 문제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서구와 비교하여 취약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도 경제위기라는 경기하강국면에서 등장하게 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합의는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구조를 표출해왔다. 실제 노사정위원회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 합의를 검토한 바 있는 Baccaro and Lim (2007) 은 사회적 합의의 지속성과 확산의 조건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즉 노동과 자본)을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그에 따라 협의된 정책의 실현성 즉 사회협약화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 경우 한국은 정부의지는 있지만 협약화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동의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한 그간의 많은 진단들은 결국 불안정한 한국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사회적 합의의 등장에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사회적 합의의 안정적 운용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한편, Pekkarinen et al. 은 사회적 합의의 주요 특징을 ‘비배제성(non-exclusive)’과 ‘평등성(egalitarian)’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말은 “첫째, 노동시장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집단을 배제하지 않으며, 둘째 증가하는 경제적 후생의 이득과 불황기의 궁핍 및 구조조정의 부담 모두를 높은 수준의 평등도로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Pekkarinen, Pohjola, Rowthorn, 1992, p. 3).²²⁾ 이러한 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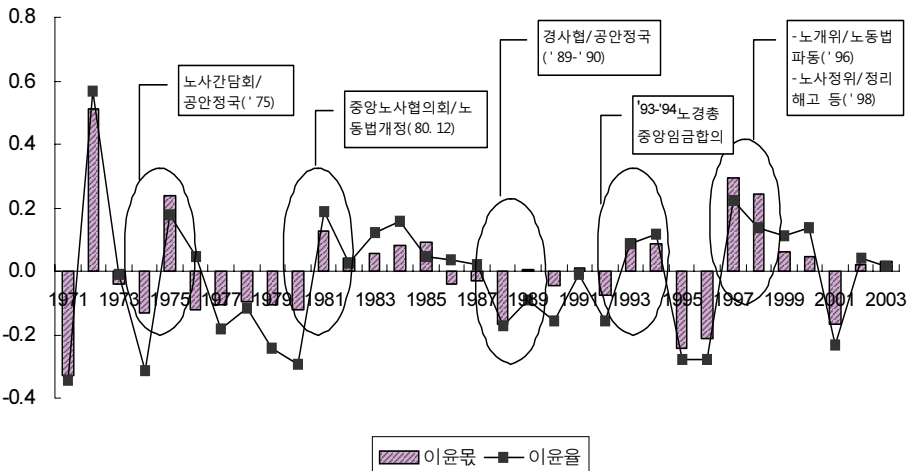
따라 여기서는 앞 절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불안정성이 축적구조적 측면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경기변동적 국면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적 합의의 평등성 조건

Pekkarinen et al. 의 두 가지 기준에서 볼 때 경기변동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평등적 성격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가 경제위기라는 비상한 국면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위기국면에서의 고통분담과 위기 이후 그 과실의 향유의 향배가 사회적 합의의 안정성 여부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2>은 이윤율과 이윤분배몫의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이윤율과 이윤분배몫의 변동추이



자료: <부표 1> 참조.

- 22) 물론 사회적 합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이보다 더 엄밀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예로 은수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①자율과 포섭에 기초한 '통합성'의 원리, ②위기의식 등의 외부적 요인, ③대표성으로서의 민주적 연대성, ④사회적 의제형성에서의 포괄성과 상호주의, ⑤책임과 신뢰 및 정부의 적극적 태도(은수미, 2006). 최영기 외 역시 이와 비슷하게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 한다: ①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발적 참여, ②사회적 파트너들의 대표성, ③노·사·정간의 공정한 교환, ④사회적 주체들의 직접적 이익을 넘어서는 협약적용범위(최영기 외, 1999, pp. 14-15).

위의 <그림 2>에서 보면 사회적 합의가 발생하는 시점은 이윤분배몫의 증가율이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그리하여 이윤율 역시 양(+)의 값으로 국면전환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1975년의 노사간담회, 1980년의 중앙노사협의회, 1990년의 경사협, 1993~94년의 노·경총 중앙임금합의, 1998년의 노사정위원회가 이를 말해준다. 특히 이를 물리적 노동통제가 직접적으로 행사되었던 198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좀 더 살펴보자. 우선 1971~72년 동안 1971년의 큰 폭의 이윤율 하락 및 경제위기에 대해 국가보위법, 유신독재 등에 의한 강력한 노동통제가 행사되면서 이윤분배몫의 급반전과 함께 큰 폭의 이윤율 상승이 관측된다. 1975년 노사간담회 및 1980년 중앙노사협의회가 구성되던 시기 역시 이러한 관측은 뚜렷하다. 일방적 노동통제의 효과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두환 정권 집권기의 1980~87년까지 7년 동안 유지되는 양(+)의 이윤율변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와 임금분배압력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준다.²³⁾

한편,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합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1987년 이후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적 흐름은 유지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임금상승 효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1988년의 이윤분배몫 및 이윤율이 반전되는 시기는 1989~90년 경사협의 등장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임금인상률을 핵심의제로 삼았던 1993~94년의 노·경총 중앙임금합의의 시기 역시 이윤분배몫과 이윤율의 변동이 양(+)의 값으로 추세반전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IMF외환금융위기 국면에서 출발한 노사정위원회의 등장시기를 전후한 1997년과 1998년에 이윤분배몫 및 이윤율이 큰 폭으로 회복한 이후 2000년까지 4년간 양(+)의 이윤분배몫 및 이윤율변동이 지속된다.

실제 이를 해당 기간 동안 제조업 부문 실질임금지수 추이로 확인해보자. <표 7>을 보면 1987년에서 1989년간 지속된 노동자대투쟁에 의한 임금상승효과는 1년간의 시차를 두고 1988년에서 1990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두 자리수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다. 그러나 1989년 봄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파업과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맞물려 일련의 강경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공안정국’ 아래서 정부당국의 강력한 노동억압이 진행된 1990년의 다음해인 1991년 임금상승률은 6.9%라는 한 자리수

23) 최장집은 한국의 “국가와 자본은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의 강도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최장집, 1993, p. 291)는데 결국 이러한 억압의 물적 조건 및 목적이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해진다.

로 억제된다. 또한 노·경총 임금합의가 이루어졌던 1993년의 경우 5.8%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노태우 정부가 1990~92년에 걸쳐 시행해 온 일방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이 “1992년 총액임금제를 끝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데 따른 노동정책상의 변화가 반영되었다(최영기 외, 1999, p.59). 한편, 노개위의 노동법파동을 겪은 1997년의 경우 0.7%로 극도의 임금억압이 이루어지고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된 1998년의 경우 -9.9%라는 큰 폭의 임금인하가 이루어진다.

결국 이와 같은 임금상승률의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이윤분배몫 및 이윤율 변동의 템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이는 그간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적어도 경제적 위기국면에서 노동과 자본간 분배몫을 둘러싸고 악화된 이윤분배몫 및 이윤율의 상승반전을 위한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방식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합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었고 도구화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도록 한다.

2. 사회적 합의의 비배제성 조건

물론 이와 같은 해석, 즉 사회적 합의의 등장기가 이윤분배몫 및 이윤율이 반전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회적 합의의 불안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Weisskopf의 미국사례 및 한국사례에서처럼 이윤분배몫과 이윤율의 회복은 불황국면에서 경기확장국면으로 즉, C국면에서 A국면으로 국면전환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서유럽과 달리 중앙단위의 사회적 합의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의 안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정치지형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이 문제 역시 1987년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987년 민주화운동이 전개되기 이전 권위주의 정권시기에는 압도적 노동통제전략이 상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

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형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도 1987년 이후 사회적 합의의 등장기에 노동통제전략의 강도와 형태변화에 대한 비교의 준거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앞의 〈그림 1〉과 〈그림 2〉 그리고 〈표 6〉에서 살펴본대로 1971년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기에 국가는 1971년 말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국가보위법 발동과 1972년 10월 유신 및 이후의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대응했다. 이 법들은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 국가의 노동정책이 직접적이고도 강도 높은 노동력관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김삼수, 2002).²⁴⁾ 이러한 노동정책의 기조변화 속에, 즉 국가보위법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1973년과 1974년의 노동법 개정에서 노사협의회 관련 조항을 확대했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보위법 제9조에 의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부인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는 결과적으로 노사협의회에 의해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김삼수, 1998, p. 271: 강조는 원문). 따라서 곧이어 등장하는 노사간담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기구라기보다는 위기국면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이미 준정부기관화한 한국노총이 자연스럽게 협조적인 제스처를 취한 모양 갖추기 성격의 것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 중앙노사협의회가 도입되었을 때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군부의 초법적 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정화조치 등으로 조직노동운동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나아가 1980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대한 전면적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제3자 개입금지’ 등으로 기업별체제를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면서 나아가 쟁의권도 박탈하였다. 따라서 1987년 이전 중앙단위 사회적 합의의 실질화를 위한 노동의 참여는 근본적으로 배제 당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된 노동자대투쟁 이후 1990년에 도입되는 경사협은 사회적 합의의 성격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즉 1987년 이전 국가의 일방적 노동배제적 정책이 새로운 사회

24) 박정희 정권 1970~1979년 사이를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는 체제가 완성된” 억압적 배제노동체제로 규정하는 노중기는 1970년대 들어 시행된 일련의 조치들을 “60년대 후반에 준비되었던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사전포석으로”서 “선제조치 성격의 정책 실행인 것”으로 평가한다(노중기, 2008, pp. 92-93).

적 합의형태의 등장 속에 어떤 성격변화를 하는가를 보여 줄 것이다.

〈표 7〉 구속노동자 비중 변화(1988~2001년) 및 제조업 실질임금지수 추이

(단위: 명, %, 실질임금추이는 2005=100)

구 분	쟁의발생건수	①쟁의참가자수	②구속노동자수	구속노동자비중 (=②/①)	실질임금지수추이
1988	1,873	293,455	80	0.03	35.5(11.6)
1989	1,616	409,134	611	0.15	42.0(18.3)
1990	322	133,916	492	0.37	46.5(10.7)
1991	234	175,089	515	0.29	49.7(6.9)
1992	235	105,034	274	0.26	54.1(8.9)
1993	144	108,577	87	0.08	57.2(5.8)
1994	121	104,339	188	0.18	62.2(8.7)
1995	88	49,717	165	0.33	65.4(5.2)
1996	85	79,495	149	0.19	70.0(6.9)
1997	78	43,991	143	0.33	70.4(0.7)
1998	129	146,065	219	0.15	63.5(-9.9)
1999	198	92,026	129	0.14	72.3(13.9)
2000	250	177,969	97	0.05	76.7(6.1)
2001	235	88,548	241	0.27	78.4(2.1)

출처 및 자료: 구속노동자 비중변화는 은수미(2006, p.39), 제조업 실질임금지수 추이는 한국노동연구원(2007), 『KLI 노동통계』. 실질임금지수 추이의 () 안 값은 연평균 증가율임.

위의 〈표 7〉은 1988~2001년간 구속노동자의 비중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사협이 발족하는 시점인 1990년 4월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쟁의발생건수가 1990년 급격히 위축된다. 또한 구속노동자수의 경우 1988년 80명에서 1990년의 경우 492명으로 급증한다.²⁵⁾

노동통제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속노동자 비중의 경우도 1988년 0.03%에서 1990년의 경우 0.37%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특히 활성화된 노동

25) 위의 〈표 7〉과 다소 숫자는 다르지만 이러한 추이는 또 다른 자료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확인된다. 즉 1988년 3월 1일부터 1991. 7. 31일간 연도별 구속노동자수의 현황에서 1988년 147명이었던 구속노동자수는 1989년 946명으로 폭등하고 1990년 691명, 1991년 564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구속노동자 현황조사,” 『조사통계』, pp.91-93) (1991. 7. 31 현재).

운동이 1989년 공안정국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 공안정국과 함께 현대중공업, 서울지하철, 모토롤라 노조 등의 쟁의에 국가는 폭력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와 자본이 연합한 지배블록에 의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과 같은 것”(최장집, 1997, p. 366)으로서 이로써 노동운동은 급격하게 수축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대체로 1989년 3월 22일 정부가 폭발적인 임금인상억제를 위한 협의적 외피방안으로 제안한 ‘국민임금조정위원회’안 혹은 ‘노사안정위원회’안 등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민간기구로서 ‘국민경제사회위원회’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0년 4월 10일 경사협의 창립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노·경총 중앙임금합의가 이루어졌던 1993년에는 앞선 네 해 동안에 비해 구속노동자수 및 구속노동자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바로 다음해 즉 두번째 노·경총 중앙임금합의가 이루어졌던 1994년 들어 다시 반전된다. 1993년 각각 87명과 0.08%이었던 구속노동자수 및 구속노동자비중은 1994년에 쟁의발생건수와 참가자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188명 및 0.18%로 크게 늘어난다.²⁶⁾

한편, 전면적 경제위기로 치닫던 IMF 외환위기 국면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하였던 1998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재연된다. 즉 쟁의발생건수가 1997년의 78건에서 129건으로, 쟁의참가자수는 43,991명에서 146,065명으로 폭증하면서 1990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외환위기 직전 상대적으로 140여명 안팎에서 유지되던 구속노동자수 역시 21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사회적 합의형태를 둘러싸고 전개된 경제적 구조와 노동정치지형변화에 있어서 위기국면에 봉착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전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사협의 등장시기가 공안정국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하며 또한 민주노총의 참여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형태, 즉 노개위가 가동되던 1996년의 경우 정리해고 법제화를 담은 노동법 날치기가 시도되면서 연말의 격렬한 노동법 파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2.6 협약이 있고 난 후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대적인 정리해고 등 광범위한 구조조

26) 이는 “경쟁력 강화를 지배 이데올로기의 한 축으로 삼고 있었던 김영삼 정권”이 “1993년 하반기 이후 노동 영역에서의 개혁을 포기하고 배제 전략을 다시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노종기, 2008, p. 34)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이 진행되면서 노사정간 관계는 악화되었다.²⁷⁾ 사실상 주요 경제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 노동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그림 2> 그리고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사회적 합의의 발생시점은 경제적 위기발생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노동운동탄압과 노동법의 개악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왜 그간 한국의 사회적 합의의 실험들이 대부분 단명하거나 실패로 끝나는지 혹은 불안정하게 지속되는지를 설명한다. 즉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등장하는 사회적 합의는 노사정간 상호신뢰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의 기본전제인 비배제성과 평등성원칙이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더 훼손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⁸⁾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편에서는 1998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 사회적 합의의 실험으로 적극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노동배제 전략의 이데올로기적 하부 통제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²⁹⁾ 또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주체인 노동계, 특히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사회적 합의의 도입과 관련한 경제위기국면에서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매 시기 주요전술로 채택하는 이유도 국가와 자본이 그동안 보여준 이러한 노동정책에 대한 반사적 태도의 산물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축적구조, 특히 경제적 위기의 구체적 조건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합의의 등장의

27)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2006년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가 가동되고 2007년 '노사발전재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순간에 전체구속 노동자수의 70~80%가 절박한 생존권적 성격을 띤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는 상황은 사회적 합의의 조건으로 살펴본 평등성과 비배제성이 여전히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8) "특히 분규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구속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같은 거시적 조절을 이루어내기 위한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은수미, 2006, p. 39).

29) 즉 "김대중 정부는 한편에서 노사정위(노사정위원회-인용자)를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그 합의와 명분에 반하는 노동억압을 지속하였"던 "국가전략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을 뒷받침하고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었던 통제장치"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노중기, 2003, p. 56).

일반적 조건으로 경제위기를 꼽지만 정작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합의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적 합의의 경기변동론적 분석 속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축적체제 변동과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의 단속성과 지속성의 변용, 즉 사회적 합의의 주기적 발생과 소멸이 한국의 자본축적과정 상의 경기변동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75년 노사간담회, 1980년의 중앙노사협의회, 1990년 경사협, 1993~94년 노·경총 임금합의,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현은 정확하게 경기가 정점에서 저점으로 후퇴하는 경기불황기와 일치하였다. 특히 이를 Weisskopf의 접근방법을 따라 각 순환주기를 A, B, C국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국가와 자본의 비상한 대응이 나타나는 C국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경기변동적 성격과 맞물려 왜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단속적이며 불안정한가를 또한 살펴보았다. 이를 사회적 합의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는 평등성과 비배제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경제적 위기국면에서 악화된 이윤분배 및 이윤을 상승을 위한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방식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평등성의 조건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사회적 합의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도구화되었다는 의심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평등성의 훼손 과정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배제적 전략의 지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 조건 역시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회적 합의의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인 경기불황국면에서 역설적으로 노동역압적인 제반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발생하는 시기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시점이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 이래 지속된 노동운동탄압과 노동법의 개악이 집중되는 시기와 일치하고 나아가 이는 노동쟁의 및 구속노동자수의 변동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합법화 및 제도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적 합의 역시 그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질적 변형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노개위 이전의 대부분의 합의가 민주노조진영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 동원적 ‘유사 사회적 합의’(최영기 외, 1999, p. 107)였

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했던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실질적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었다. 따라서 노동정치가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들이 구조화된 것'(노중기, 2008)이라는 점에서 특히 경기변동의 규칙성과 함께 구조와 전략, 행위간의 역동성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사회적 합의의 등장과 소멸을 경기변동 속에서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지만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결합된다면 이 역동성은 좀 더 명시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명세, "민주주의와 사회합의주의," 김호진·임혁백 외, 『사회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2. 김삼수, "박정희 정권 시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단결금지'의 노동정책과 기업내 노사협의제," 『사회경제평론』, 제18호, 2002, pp. 255-287.
3. 노중기, "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 1987~1997년," 『경제와사회』, 제36권, 1997, pp. 128-156.
4. ———, "노사정위원회 5년, 평가와 전망," 『동향과전망』, 제56호, 2003, pp. 48-76.
5. ———,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후마니타스, 2008.
6. 유범상, "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치와 사회적 합의: 등장, 전개, 해석," 『동향과전망』, 제56호, 2003, pp. 12-47.
7. 은수미,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상호관계와 사회적 의제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6.
8. 이종래, "1990년대 축적체계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계 변화: 1987~2003』, 한울, 2006.
9. 임상훈,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노·사·정의 전략과 활동전망," 『동향과전망』, 제56호, 2003, pp. 77-109.
10. 임영일,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 코포라티즘 혹은 재급진화," 『경제와사회』, 제40호, 1998, pp. 102-124.
11. 장홍근,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1987~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1999.
12. 정성진, "한국자본주의 축적의 장기추세와 위기: 1970~2003,"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체계변화: 1987-2003』, 한울아카데미, 2006.

13. 조효래,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변화,” 『동향과전망』, 제34호, 1997, pp. 50-80.
14.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15.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1997.
16. 최영기 · 김 준 · 노중기 · 유범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1: 1987년 이후 사회적 합의
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9.
17. 표학길, 김종일, 이진면, “한국의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축계(1953-2000),” 『한국경제의 분
석』, 제9권 제1호, 2003, pp. 203-282.
18. Baccaro, L. and L. S-H Lim, “Social Pacts as Coalitions of the Weak and Moderate:
Ireland, Italy and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13. No. 27, 2007, pp. 27-46.
19. Boddy, R. and J. Crotty, “Class Conflict and Macro-Policy: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 7, 1975, pp. 1-19.
20. Foley, D.K. and T.R. Michl, *Growth and Disrtibution*, Harvard Univ. Press, 1999.
21. Glyn, A. and R.B. Sutcliffe, *British Capitalism, Workers and the Profits Squeeze*,
Harmondsworth, Penguin, 1972.
22. Henley, A., “Labour’s Shares and Profitability Crisis in the US: Recent Experience and
Post-War Trend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1, 1987, pp. 315-330.
23. Lehbruch, G., “Liberal Corporatism and Party Government,” in Philippe C. Schmitter
and Gerhard Lehbruch(ed.), *Trends Towards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Sage, 1979.
24. Munley, F., “Wages, Salaries, and the Profit Share: A Reassessment of the Evid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5, No. 2, 1981. pp. 159-173.
25. Pekkarinen, J., Pohjola, M. and B. Rowthorn(eds.), *Social Corporatism: A Superior
Economic System?*, Oxford Univ. Press, 1992.
26. Schmitter, Philippe.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Review of Politics*, Vol. 36.
1974, pp. 85-131.
27. Sherman, H., “Inflation, Unemployment, and Monopoly Capital,” *Monthly Review*, Vol.
27, No. 10, 1976, pp. 25-35.
28. Schultze, C., “Short-run Movements in Income Shares,”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27, NBER, 1964.
29. Weisskopf, T.E., “Marxian Crisis Theory and the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S
Econom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9, No. 4, 1979, pp. 341-378.

〈부표 1〉 제조업 부문의 주요비율(1970-2003)

(단위: 10억원 및 백분율)

	(1) Y 부가가치	(2) W 임금	(3) Π 이윤	(4) K 순고정자 본소득	(5) ρ 이윤율	(6) σ_{π} 이윤분 배몫	(7) y 실질소득	(8) Z 명목잠재 생산	(9) ϕ 잠재가 동물	(10) ζ 잠재생산 /자본
1970	385	276	109	700	0.156	0.283	4529.4	514.0	0.749	0.734
1971	470	375	95	866	0.110	0.203	5000.0	559.5	0.840	0.646
1972	643	425	218	1,122	0.195	0.340	5953.7	756.5	0.850	0.674
1973	944	635	309	1,602	0.193	0.327	7375.0	1201.0	0.786	0.750
1974	1,277	910	367	2,603	0.141	0.287	8806.9	1576.5	0.810	0.606
1975	1,712	1,090	622	3,695	0.168	0.363	10190.5	1895.9	0.903	0.513
1976	2,561	1,736	825	4,677	0.176	0.322	12678.2	2747.9	0.932	0.588
1977	3,247	2,305	942	6,423	0.147	0.290	14495.5	3279.8	0.990	0.511
1978	4,474	3,295	1,179	9,033	0.130	0.263	17476.6	5202.3	0.860	0.576
1979	5,741	4,383	1,358	13,271	0.102	0.237	18459.8	6875.4	0.835	0.518
1980	7,066	5,587	1,479	19,339	0.076	0.209	18594.7	8312.9	0.850	0.430
1981	9,116	6,953	2,163	23,422	0.092	0.237	21601.9	10612.3	0.859	0.453
1982	10,478	7,892	2,586	27,275	0.095	0.247	23284.4	11064.4	0.947	0.406
1983	12,829	9,489	3,340	31,237	0.107	0.260	26782.9	12998.0	0.987	0.416
1984	15,481	11,105	4,376	34,922	0.125	0.283	31529.5	15943.4	0.971	0.457
1985	17,080	11,785	5,295	40,314	0.131	0.310	33036.8	16663.4	1.025	0.413
1986	21,300	14,950	6,350	46,558	0.136	0.298	40113.0	20461.1	1.041	0.439
1987	25,904	18,399	7,505	54,020	0.139	0.290	47270.1	25421.0	1.019	0.471
1988	31,117	23,474	7,643	65,506	0.117	0.246	51348.2	30839.4	1.009	0.471
1989	33,293	25,070	8,223	77,018	0.107	0.247	53611.9	32481.0	1.025	0.422
1990	37,848	28,918	8,930	97,934	0.091	0.236	60653.8	35739.4	1.059	0.365
1991	46,592	35,507	11,085	122,821	0.090	0.238	64264.8	46732.2	0.997	0.380
1992	51,532	40,162	11,370	147,227	0.077	0.221	66837.9	49837.5	1.034	0.339
1993	58,594	44,321	14,273	169,862	0.084	0.244	70510.2	53364.3	1.098	0.314
1994	70,267	51,621	18,646	197,259	0.095	0.265	79577.6	66352.2	1.059	0.336
1995	80,540	63,780	16,760	234,246	0.072	0.208	85955.2	75766.7	1.063	0.323
1996	86,550	71,968	14,582	269,248	0.054	0.168	90344.5	84029.1	1.030	0.312
1997	93,114	72,121	20,993	310,270	0.068	0.225	87926.3	101652.8	0.916	0.328
1998	92,052	65,552	26,500	341,351	0.078	0.288	88426.5	87335.9	1.054	0.256
1999	102,571	71,265	31,306	360,077	0.087	0.305	101055.2	100856.4	1.017	0.280
2000	120,507	82,075	38,432	384,946	0.100	0.319	119432.1	125921.6	0.957	0.327
2001	119,820	87,559	32,261	408,532	0.079	0.269	125073.1	116443.1	1.029	0.285
2002	129,538	93,878	35,660	434,296	0.082	0.275	134795.0	122552.5	1.057	0.282
2003	135,879	97,281	38,598	462,439	0.083	0.284	142880.1	128430.1	1.058	0.278

〈부표 1〉 제조업 부문의 주요비율(1970-2003)의 주 및 자료

- (1) 부가가치 (Y)는 ≪국민계정≫(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와 요소소득' 표 중 제조업 부문 '국내요소소득'임. 단, 국내요소소득=총산출-중간소비-간접세+보조금-고정자본소모임.
- (2) 임금 (W)은 ≪국민계정≫(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와 요소소득' 표 중 제조업 부문 '비용자보수'를 조정한 '임금등가(wage equivalent)'로서 정성진(2006)의 자료를 이용함.
- (3) 이윤 (Π)= $Y-W$ 임.
- (4) 순자본소득(K)은 표학길, 김종일, 이진면(2003)의 제조업 부문 경상가격 순자본소득에 2003년까지 자료가 추가수록된 정성진(2006)의 자료를 이용함.
- (7) 실질소득(y)은 부가가치를 GDP디플레이트로 나누어 구함.
- (8) 명목잠재생산(Z)은 부가가치를 분기별 제조업 가동률(2000년=100기준)로 나누어 구함.
- 부가가치, 임금, 이윤 및 실질소득 연도별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변환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이용함.

The Social Corporatism and Business Cycles in Korea

Deok-Jae Lee*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cial corporatism in Korea in a business cycles perspective. It argues that: first, although not stable and alive long, various forms of social corporatism have been introduced since 1970 at the phase of economic crises. Second, instability of the social corporatism in Korea could be explained by frequent violation of the corporatist principle of 'non-exclusion' or 'egalitarianism'.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presented in this work should also be expected to enlarge the scope and range of issues in the related field including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ur politics.

Key Words: social corporatism, business cycles, economic crises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